

제안내용 설명서

제 안 분 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 과제명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 특성화고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여러 차례의 취업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의 취업 성과는 저조했으며 취업이 되어도 졸업자의 상당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 직장 내 차별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직업계고 출신자에 있어 이들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제도적 혜택으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등직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충분한 어드밴티지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에 문제의식을 두고, 특성화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운용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 및 취업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 특성화고 역량평가 도입을 통한 양질의 직업교육시스템 유지/관리 - 역량평가를 활용한 학교 / 학과 통폐합 - 특성화고 졸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산업 계열로의 전환 지원 - 전문교과 시수 확대 - 교원 역량 강화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창업 제도 개선 - 계열 전환과 연계하여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취업 촉진 - 현장실습 기업 인증 제도 개편 -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지원 활성화 방안
④ 기대효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시장 경쟁력 향상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 특성화고

머릿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코로나-19 정국 속, 특성화고 재학생은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취업은 고사하고 자격증 시험일이 모두 차일피일 미뤄져 대비할 시간도 없으며
어렵게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며 **첫 출근 하기도 전에
취업 취소 통보**가 오는 경우를 겪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사태 영향만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공업고, 상업고를 거쳐 지금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이르기까지
고졸은 그저 계약직, 노예로 쓰다 버려지는 부품이었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 학력 비하와 임금 승진등의 차별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
안전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면서

기업에서 교육받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했고,
기업에서는 실습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나마 있던 고졸 일자리도
위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 기관에서 고졸 구직자를 책임지겠다는
무능하고 속없이 껌데기만 존재하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우리 학생들이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제 1장 특성화고 현황 진단

1. 특성화고 현황

- ㄱ. 특성화고의 의미와 역사
- ㄴ. 진학 이유 및 인식
- ㄷ. 전국 특성화고 현황

2. 현장 실습 현황

- ㄱ. 기존의 현장 실습 제도
- ㄴ. 문재인 정부의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
- ㄷ. 현장 실습 제도, 그 후

특성화 고등학교의 의미와 역사

특성화고란 1998년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당초 전문계 직업학교 중 우수한 학교를 선발해 특성화고로 전환 하였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가까운 성격을 지녀 각 학교의 건학 이념과 과정을 존중해 입시와 취업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009년 즈음에 직업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이 시작되어 2012년에는 모든 직업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되고 학교별 건학 이념과 교육 과정이 퇴색되는 진통을 겪었다.

진학 이유 및 인식

2018년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 재학생 대상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빠른 취업을 위해 진학하였다고 밝혔다.¹⁾ 이러한 배경에는 가정환경이 뒷받침하는데, 직업계고 학생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일반고 13%) 28% 수준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생계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²⁾

문항	인원수	비율
①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77	33.33%
② 진로에 맞는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46	19.91%
③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39	16.88%
④ 최신 기계 또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고 싶어서	1	0.43%
⑤ 전공에대한전문적인교육,커리큘럼이기대돼서	9	3.90%
⑥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하고 싶어서	6	2.60%
⑦ 선취업후학습을위해서	27	11.69%
⑧ 학비가 저렴해서	11	4.76%
⑨ 중학교 성적을 고려해서	15	6.49%
합계	231	100%

<그림 1>

1) '18년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설문조사 결과 ['18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2) '17년 특성화고-일반고 저소득층(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19 관계부처 합동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전국 특성화고 현황

전국 특성화고는 2019년도 기준 489개교로 일반고 1,555개교의 1/3 수준에 해당한다.

연도	고등학교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9년	2,356	1,555	489	158	154,	-	-
2018년	2,358	1,556	490.	157	155,	-	-

<표 1> ³⁾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 현장에 맞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원이 일부 우수한 특성화고에 몰려 있어 대다수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중등 교육 기관을 총괄하는 교육 당국은 취업이 아닌 입시를 목적으로 두기에, 상대적으로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반고보다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19년 전국 교육기본통계/교육 통계 전국 유초중고 학교 수

기존의 현장 실습 제도

현장 실습 제도란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학생이 졸업 하기 전 미리 취업처에 근무하고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의 대다수가 현장실습에 참여해 취업 전 실습에 임한다.

기존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에게 기본적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관리 감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2014년에 특성화고에서 현장 실습을 나간 김 모 학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야간에 관리 감독자 없이 작업 중에 지붕이 무너져 사망에 이르렀다. 2018년에도 현장 실습에 나간 학생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근무 시간을 초과하고 근무했고, 관리 감독 없이 기계를 정비하던 도중 컨테이너에 깔려 참사를 당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2> [논평] 울산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 환경방송 [<http://www.eco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9>]

<그림 3> 제주 현장실습 18세의 비극...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139757>]

문재인 정부의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

이에 문재인 정부는 현장 실습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기존 현장 실습 제도를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로 개편하였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란 산업체에서 학습하는 실습 기간을 기존 대비 반으로 줄이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실습생의 신분으로서 회사에 재직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이때 학생들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교육받는 실습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내 조직에 녹아들기가 어렵고, 기업 입장에선 실제로 고용해서 직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봉급에 관계없이 초대졸 또는 대졸자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도내 실습 참여 기업 통계에 의하면 기존 실습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던 산업체가 2016년도 6,966개에서 학습 중심 실습 제도로 전환하면서 2018년도 3,794개까지 줄어 기존 대비 67.8%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경기지역 특성화고들이 '취업률 저조' 현상(12월 1일자 1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산업체들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도내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는 2016학년도 6천966개에서 2017학년도 5천592개로 1천374개(19.70%)가 감소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는 1천798개로 무려 3천794개(67.8%)나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현장실습 참여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습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했고, 학생들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실습생으로 일하다 보니 회사 조직에 녹아드는 것도 어려웠다.

<그림 4>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 그 후.

안전 기준 강화와 학습 중심의 실습을 골자로 한 제도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자 교육 당국은 2019년 후반기에 다시 실습 기간을 기존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현장 실습이 위축되고 현장 직무 능력 약화로 인한 인식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6.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인원수	비율
① 유지해야 한다	139	84.76%
② 폐지해야 한다	25	15.24%
합계	164	100%

<그림 5>

제 2장

고졸 취업 현실

1. 문제점

- ㄱ. 재학 기간 중의 문제
- ㄴ. 취업 후 발생하는 문제
- ㄷ. 정권마다 급변하는 고졸 취업 방안

재학 중 발생하는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 특성화고에 재정적 지원이 가중되어 대다수의 특성화고는 산업 현장과 거리가 먼 실습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설비 투자의 부담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교원의 재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수년 전 진행되었던 수업을 똑같이 되풀이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학생이 특성화고에서 현장 실습에 나간 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내 분위기에 적응 못해 학교로 돌아올 경우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 조치를 통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뉴스홈 | 최신기사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단하고 돌아가면 '빨간조끼' 징계"

송고시간 | 2017-10-21 16:20



이재영 기자

|"꿈 무시하고 취업 압박"...학생들 부조리 폭로 '아이 캔 스피크'

"꿈 무시하고 취업 압박"...학생들 부조리 폭로 '아이 캔 스피크'

940
로또당첨

AD

주식투

AD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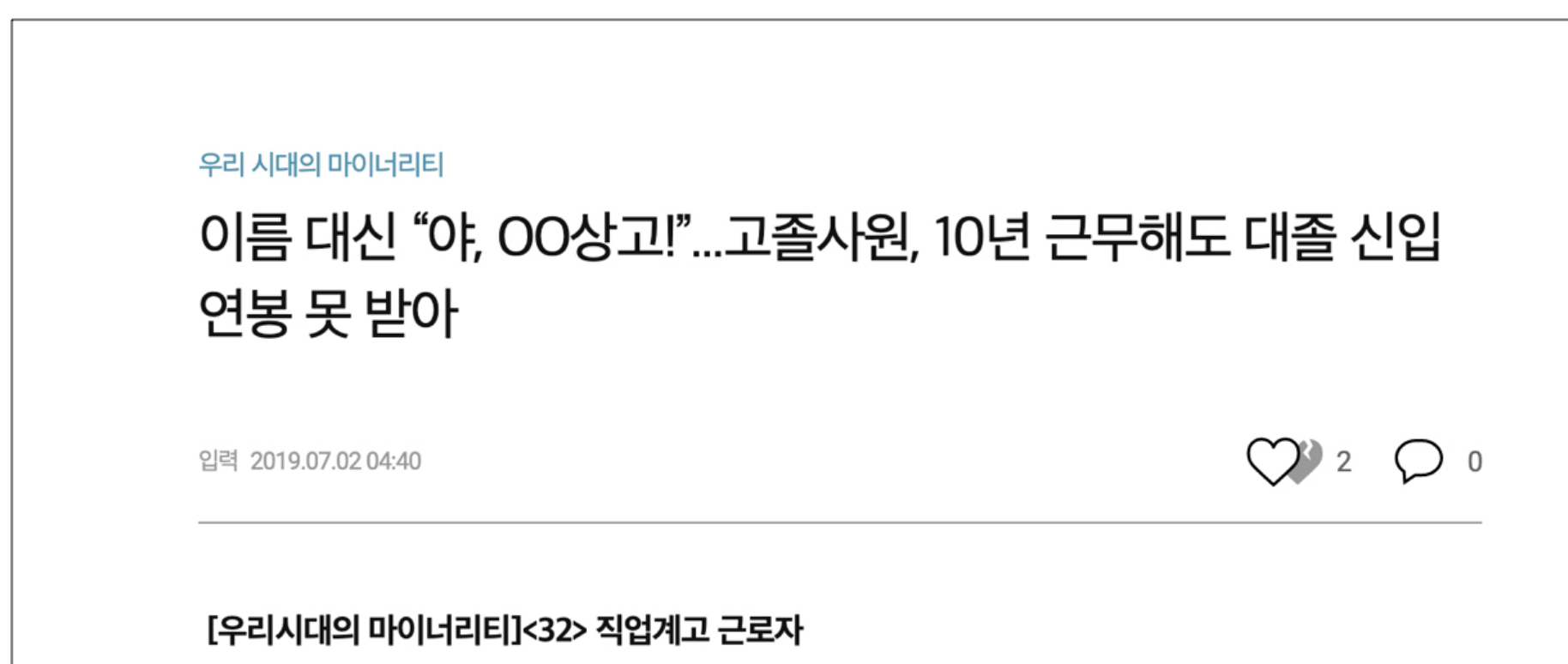
AD 세

<그림 6>

취업 후 발생하는 문제

산업수요와 불일치한 전공,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한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졸업생들은 학교의 직업교육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비숙련 노동 위주의 기관으로 취업 하며 이로 인해 부수적인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급 차별 문제는 그 중 하나이다. 각 기업에 고졸 직원에 대한 진급/승진에 대한 규정이 없어 10년 동안 근무해도 사원 직급으로 근무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능력 중심의 문화가 정착된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그림 7>



<그림 8>

“저는 평생 사원이래요. 그 흔한 주임, 대리도 못 된대요.”
상업 계열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상화(가명 · 20)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소재 제약회사에 입사했다.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회사라 부푼 마음을 안고 출근했지만, 이씨가 현실의 높은 벽을 느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옆 부서에 10년 근속한 고졸 선배 직책이 그냥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인사팀에 ‘고졸 출신은 승진 기회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림 9>

<그림 7> 이름 대신 “야, OO상고!”...고졸사원, 10년 근무해도 대졸 신입 연봉 못 받아 - 한국일보

<그림 8> “덜 배운 애” 무시... 고졸 취업자 59% ‘부당한 대우’ - 한국일보

<그림 9> 고졸 직장인 “평생 저임금 · 승진차별 굴레”... 더 공고해진 학벌사회 - 한국일보

정권마다 급변하는 고졸 취업 방안

이명박 정부

- 마이스터고 도입
- 공공기관 고졸 의무 채용 제도 도입
- 민간기업과 고졸 취업 확대 MOU

(성과) 고졸 취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과의 MOU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양성 기여, 정권 차원의 핵심사업으로서 추진되어 고졸 취업을 확대함
(한계) 마이스터고 또는 상위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 직업계고 격차 심화

박근혜 정부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및 교육과정 연계
- 주경야독, 일학습 병행제 추진

(성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추진해 고졸의 취업자들의 자발적인 학업에 대한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가능케함
(한계) 공공 기관 고졸 채용 비율 일부 축소

정권마다 급변하는 고졸 취업 방안

문재인 정부

- 학습 중심 현장 실습제도 도입
- 취업지원관 교당 1인 이상 채용 추진
-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성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한계) 무리한 학습 중심 실습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졸 취업 시장 위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존 일자리 축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졸에 대한 취업 정책이 미비하거나 급변하게 되어 취업 준비하는 학생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처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 고졸 취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가 심각하다.

제 3장 특성화고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정책목표

2. 특성화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

- ㄱ. 특성화고 역량평가제도
- ㄴ. 하위권 학교에 대한 통·폐합 실시
- ㄷ. 계열 전환 지원

3.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 ㄱ. 전문교과 수업시수 조정
- ㄴ. 교원 역량 강화

4. 현장실습&창업 지원

- ㄱ. 현장실습 기업 인증제 개편
- ㄴ. 실습·취업·병특 연계트랙 신설
- ㄷ. 특성화고 통합 정책 협의체 설립

5. 정책 기대효과

제안 배경/정책 목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과정 및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기인한다. 그간 직업계고에서 진행해 온 교육과정 및 이에 대한 개편안은 단순히 산업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학생을 양성해오는데 주력해왔다. 이는 학생들의 역량을 하향평준화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직업인을 양성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왔던 방안은 ‘고졸 취업 확대’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취업장려금 및 고졸자 우대를 통해 정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는 대졸자에 비해 매우 관대한 문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 논란만을 낳아왔다. 또한 대다수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이같은 정부의 강제적인,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자리 확대 정책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시장 경쟁력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제시한다. 이는 대졸자와 중복되지 않는 직업군 및 직급에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성화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

직업계고 출신자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공계 및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그러나 비교적 산업수요와 잘 연동되고 있는 마이스터고와는 달리, 현재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취업시장에서 출신자가 대졸자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의 계열(전공)이 다수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신산업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열 편성으로 인해 해당 계열(전공)의 경쟁력이 부족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이 이어지지 못해 부실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는 지속적으로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는 특성화고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위권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직업교육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 비해 충분한 교육적 효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 수와 교육의 질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 및 학교 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체제를 개편하고, 점진적인 소수정예화를 도모하여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

특성화고 역량평가제도 도입

- 매년 전체 특성화고의 역량 진단
- 유관기관 관계자 및 외부인으로 구성된 직업계고 정책결정 협의체 산하 특성화고역량평가위원회가 전담
- 교육 환경, 재학생 취업결과 및 진로 현황 등 종합적 평가

특성화고 역량평가 하위권 학교에 대한 통 · 폐합 실시

- 하위권 학교에 대해서는 학과 혹은 학교 단위 통 · 폐합 가능
- 통 · 폐합 비율은 당해 전체 특성화고의 인원모집 미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직업계고 정책결정 협의체에서 결정
- 경영, 무역, 금융, 유통정보 / 전자상거래 / 보육 / 관광 / 복지서비스 / 농업 / 산림, 동물자원 등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계열 및 해당 계열 위주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통 · 폐합

계열 전환 지원

- 협의회 및 위원회의 판단으로 통합대상 학과 및 학교에 대해 이공계열 혹은 신산업 계열(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드론, 로봇 등)을 중심으로 전환
- 전환대상 학과 및 학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존 전문교과 교원 대상 전환연수 프로그램 지원

▶ 특성화고 역량평가 도입 및 부실 특성화고의 통 · 폐합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의 질을 유지 · 관리하고 교육자원을 집중하여 학생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 경쟁력이 부족한 계열에 있어 신산업 분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계고 교과과정 개선

전문교과 수업시수 조정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 전문 역량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교과 수업시수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육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 고교학점제와 별도로 직업계고의 교과과정 편성 자율성 보장
-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수를 일부 감소
- 예체능 과목 등 기타 불필요한 과목의 수업시수를 최소한으로 감소
- 전문교과 시수 대폭 확대

교원 역량 강화

전문교과 수업의 질 향상 역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산학겸임교사 제도 및 지원책이 존재하나, 부족한 제도 활성화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다.

한편, 기존 교원의 역량 강화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다. 기존 교원 역시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산학겸임교사 확대를 위한 처우 개선
- 직업계고 산학겸임교사 비율 단계적 의무화
- 양질의 산학겸임교사 확보를 위한 산학겸임교사 채용조건 강화
- 기존 직업계고 교원들에 대한 산학연계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다방면적으로 활성화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현장에 접목하고, 기존 교원의 경우에도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통찰과 교육자로서의 전문 능력이 융합되어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등 우수한 일선 교원을 확보하여 전문교과 수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수인력 육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현장실습 제도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실습 환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보다 양질의 실습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선 현장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절에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여도, 실질적으로 양질의 실습 기업을 찾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장실습 제도의 일부 개선을 제안한다.

-> 계열 개편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우수한 정보기술 기업, 벤처기업으로 현장실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현장실습 기업 인증제 개편

기존 단일 인증 체제에서 인증기업 · 우수인증기업(가칭) 으로 2단계 인증체제 도입

인증기업: 근로환경, 안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관기관이 인증, 현장실습생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

우수인증기업: 인증기업 중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취업 전환률이 높은 기업을 소관기관이 인증, 인센티브 부여

현장실습 · 취업 · 병역특례 연계트랙 신설

- 형평성을 위해 병역특례 연계트랙은 우수인증기업만 운영 가능
- 현장실습 후 취업, 산업기능요원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트랙 지원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력단절 방지

학생 주도 선도적 창업

- 직업계고 대상 창업 콘테스트 확대-진흥 지원
- 창업 등 각종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 지원 거점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 조성
 - 교내 메이커스페이스 설립 지원 확대
 - 직업계고 예비 창업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창업 트렌드 활성화

직업계고 관련 각종 정책결정을 위한 통합 협의체 설립

- 산학협력, 현장실습, 정원 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협의 등 직업계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통합 협의체 출범
- 관계부처 인원 및 직업계고 교사, 직업계고 학생, 주요 산업분야 현직자, 교육 전문가, 경제단체인 등 외부인으로 구성
-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직업계고 관련 정책이 변동됨을 막고,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추어 보다 능동적인 정책추진을 위함
- 교육정책 자문 기구(국가교육위원회 등) 연계

▶ 현장실습 기업 인증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현장실습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인재를 유치하고자 우수기업 인증을 목표로 자발적 환경 개선, 취업 연계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을 선택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선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학생 및 현장실습 기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보다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진로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및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커뮤니티 등을 조성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기대효과

본 제안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이 대폭 향상되고, 취업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적 혜택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가진 높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직능 중심의 우수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은 선순환 생태계 속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던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졸자와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은 신산업 분야 및 직군으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특성화고 졸업생이 보다 수월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내용 설명서

제 안 분 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 과제명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JOB-ALIO)과 연계한 공공기관 채용 불공정 감시 체계 구축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공무원 공개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은 면접이 채용에 있어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의 외압이 많고 실제로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 합격자가 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힘없고 배경이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JOB-ALIO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본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공기관만이라도 채용에 있어서 불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 (제안요약)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에 있어서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보장되는 특성 탓에 채용 과정에 외압의 우려가 크므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취업을 신청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구직자의 가족관계(직계 존속)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후 최종 합격시 2차적으로 합격자의 4촌 관계까지 확인토록 하여 고위공직자 등 권력에 의한 채용 불공정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 ※ 자세한 내용은 뒷장 첨부
④ 기대효과	■ 2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어떤 고위 공직자나 의원과 연계된 불공정 채용 사례가 있는 지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 채용 불공정을 줄이는 데 기여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공공기관 채용 불공정 감시체계 구축

□ 문제점 및 대책

- 시험이라는 공개경쟁을 통한 공무원 채용(자치단체 및 국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채용은 면접이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는 관계로 외부의 힘에 의해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게 변질되는 사례가 많아 촘촘한 대책 필요

■ 정부(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면접이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는 채용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채용 불공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추진개요

- 대상기관 : 정부(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ex) 각종 공단, 공사, 정부(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 추진내용 :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JOB-ALIO)을 통해 공고되는 공공기관의 채용 중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취업을 신청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구직자의 가족관계(직계 존속)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후 최종 합격시 2차적으로 합격자의 4촌 관계까지 확인(채용기관, 해당 상임위)토록 하여 권력에 의한 채용 불공정 발생을 감시
- 추진시기 : 2021년 하반기부터(상반기 동안 기관간 협의 및 절차 보완)

□ 세부 추진방법

- (감시단 발족) 국민의 힘 주최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그리고 채용 주체인 중앙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불공정 감시위원단 발족

【공공기관 채용 불공정 감시위원단】

- 발족시기 : 2021년 상반기
- 참여 : 중앙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 역할 :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 불공정 감시체계 구축 및 부처 및 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

- (감시체계 구축)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에 있어서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무기계약인 경우 구직자에 대해서는 채용권자(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구직자의 가족관계(직계 존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

ex) 한국관광공사 정규직 채용시 구직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고위공무원,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용기관에서 채용정보시스템에 신청 현황을 등록토록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

◇ 가족관계 채용정보시스템 공지 방법

- (신청현황) 한국관광공사 채용 공고(2020.12.24.)와 관련하여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최종 접수 결과 고위공무원 및 의원과 가족관계가 있는 자는 총 00명임을 공지함

※ 구직자가 취업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토록 하여 이와 관련한 논란 차단

- (국회 상임위 최종 확인)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합격된 자 중 가족관계(4촌까지) 확인 결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과 관련이 있는 자는 채용 기관에서 해당 명단과 관련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채용 불공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유도

ex) 한국관광공사 관련 자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정기 보고)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결과(채용 불공정 모니터 결과)를 해당 부처(시도지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 확대계획

- 은행권 등 공공성이 필요한 기관의 채용으로 확대

제안내용 설명서

제 안 분 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교육 분야)
① 제안 과제명	“인문사회계열 융합전공 확대 통한 공정기회와 상생의 길 모색” (대학개혁과 융합인재의 두 마리 토끼)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8년 계열별 취업자 현황(최근자료)을 미루어보면 의약계열(83.3%), 공학계열(71.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취업률 인문계열(57.1%)이 수년간 지속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부지표로 보면 취업대상자 4만 명은 공학, 사회계열에 비해 1/3 수준(각각 12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취업비율은 동일한 2500명으로 나타나 4대 보험가입 취업자는 더 떨어짐. 출처 : 대학알리미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867) ○ 인문 전공은 현재 학과별 입학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리며 졸업이후 일명 공시생이 되면서 사회진입이 늦어지고 있음. 최근 현상으로 인문 전공에서 공학, 사회계열(상경계열 위주)로 복수전공을 택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문송합니다.”라는 문과 전공자 박탈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시절, 프라임(Prime) 사업을 통해 문과를 줄이고 공학계열 위주로 대학개혁을 실시했으나 학내 교수, 학생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음. 다만, ‘2012~2020년 4년제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 현황’ 발표에 따르면 언어문학 학과 12년 대비 144개, 경영·경제 학과 51개 학과 감소(9,339명)가 감소했음. 반면 입학정원이 증가한 계열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의 기타 분야가 3,553명으로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의약계열 의료분야가 1,78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공학계열의 화학공학, 컴퓨터통신 의약계열 간호학과 등의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 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함. 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 인문사회계열 학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1) 기존 프라임(Prime)사업 구조가 아닌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이해 가능하며 장기적 대학개혁의 첫 걸음마를 할 수 있으며! (2) 인문사회계 졸업생들이 취업난으로 ‘공시생’으로 내몰리며 사회진출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계열 융합전공 확대 통한 공정기회와 상생의 길 모색”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 1단계: 인문사회계열 융합전공 확대

- '17년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융합전공·전공선택제 도입,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제도	기존	개선	관련 조항
다학기제	2~4학기 중 선택	2학기 이상에서 선택	§10개정
유연학기제	통상 동일한 학기 운영 (전공학년학위과정 무관)	전공별학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10②신설
융합전공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 (학과 조정 필요 없음)	§19①개정
전공선택제	소속학과 전공필수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 가능 (전공필수제 폐지)	§19①개정
집중이수제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 하에서 학기당 통상 15주 수업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교과별 집중수업 가능	§11①신설 §11④신설
출석기준	규정 없음	출석 등 학점취득 기준 학칙에 규정	§14②신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교육부 규정상 금지	명시적 허용	§13②개정
이동수업	원칙적 금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제한적 허용	§14조의2 신설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학칙으로 정함	§58③개정

출처: <https://if-blog.tistory.com/7041>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세부적 학과 위주로
융합전공 확대 방안 마련으로 입학정원 제로화 시대검토
(융합전공은? 신입생 입학이 되지 않음)

- 융합전공이란?

연계·융합전공은 모집단위가 없어 신·편입생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한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칙에 따라서 본인이 속한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연계·융합전공만 이수하여도 학사 졸업이 가능.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연계·융합전공을 주전공(제1전공) 선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인문사회계열 취업이 낮은 세부학과를 대상으로

이전 프라임(Prime)사업구조와 같이 통폐합을 권유하지 않고 유지는 시키되 신·편입생을 받지 않고 융합전공으로 학과의 존립을 통해 주전공이 아닌 필수교양전공으로 포지셔닝 시도

○ 2단계: 교육부 차원의 제도개혁

- 대학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과통폐합 방식이 아닌, 융합전공으로 전환유도를 하는 일부 대학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방식 검토

- 학과 전공별 취업률 전수조사를 통해

공학계열·상경계열 등 기초 실용학과로 제도를 개편하고 <1+1 패키지> 추천 제도를 만들어 앞서 전환시킨

추천할 만한 인문사회계열 융합전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아래와 같은 주전공 + 융합전공 2개 융복합 전공 인재 양성

예) 기계공학 주전공(입학) + 영문학비즈니스(융합전공)
= 졸업 후 외국계 엔지니어로 진로 선택

- 대학개혁의 정책전환의 시발점으로!

대학평가(A~D)를 통한 경쟁력 유지 제도는 유지!

인문사회계열을 통폐합 방식이 아닌 융합전공으로 전환하고 학내에서 융합전공으로도 선택받지 못한다면 자연스러운 폐과 (학생들의 수업선택 자율권을 부여하고 융합전공 내 경쟁체제 발동)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 3단계: 학생설계전공을 통한 교육 자율성 확보

- 존재하지 않는 학위 과정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기획하여
학업 동기부여 가능.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전공을
개설하여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장점. 하지만 전공을
학생이 직접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여 인지도는 낮은 편

- 중·장기적으로 진로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학개혁을 통해 공정한 실력 양성 기회제공

예) 기계공학 주전공(입학) + 영문학비즈니스(융합전공)

+ Project Base, 국내·외 엔지니어 기업 분석보고서
(학생설계전공)

= 졸업 후 외국계 엔지니어로 진로 선택 (3개 전공)

- 성공사례 (아주대,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두 번째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 연다

입력: 2016-12-05 09:48

[총장과의 대화]"드라마 제작하고 학점까지"...아주대 파란학기제 호응

구독 신하영 기자
2016.07.25 06:00:00

가 ★

국내 최초, 자기주도형 학습 정규 교과에 시스템화

공유하기



학생들 팀 만들어 '하고 싶은 일' 교과목으로 설정
한 학기 동안 단편영화·자동차 제작하고 학점 이수
개설 첫 학기 때부터 학생 120명 42개 과목 참여



④ 기대효과

○ 인문사회계열 학부 전공으로 진입하여 일부(박사진학 등)를
제외하고 취업시장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주 전공으로 입학하고 융합전공을 통해 융합형 인재로 성장

→ 취업시장에서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대학개혁이라는 시대과업을 이전 방식(프라임사업 등)과
다른 유지와 존속을 하며 신입생을 없애고 융합전공으로

포지셔닝을 달리하여 단계적 개혁을 수행하는 역할 가능

→ 융합전공 내 경쟁체제로 학생들의 수업선택 자율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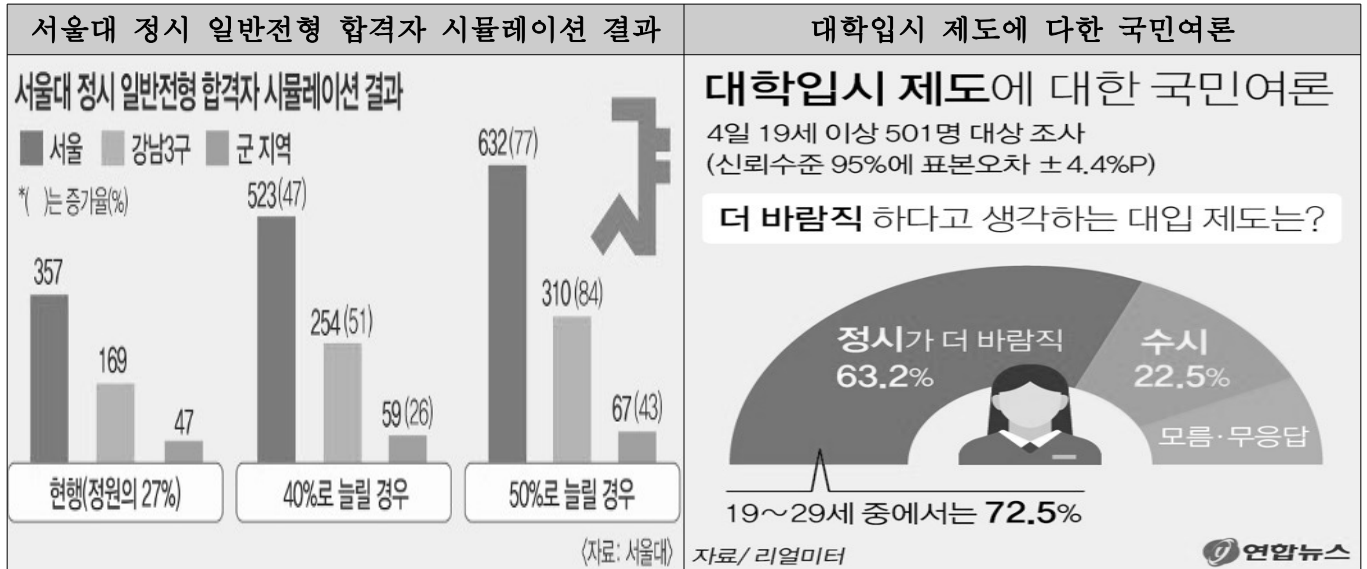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정책 제안서

정책 제안 (명)	한국 교육 지형 불 위한,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	----------------------------------

01. 정책 STP (Social Thinking Process)

STP (Social Thinking Process)	Problem 발견 또는 인식한 사회문제 Solution 해결방법 Policy-Design 정책 디자인 Social Effect 사회적 효과 Economic Effect 경제적 효과		
Plot Table 플롯 테이블	- 정책 아이디어를 STP의 프레임에 따라 나눠서 분석해보는 테이블입니다. - 각 단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카테고리별 50자 이내로 요약해주시시오.		
Problem 발견 또는 인식한 문제	01. 교육 지형 (인프라) 불균형으로 빚어진 교육 수준 격차 발생. 02. 대입 정시 확대 시, 정시 준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방)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 03. 출석률을 통한 학년 진급으로 인해 학업 성취 미달 학생의 형식적인 졸업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발생.		
Solution 해결방법	01. 검정고시와 같은 졸업 검정 시험을 통한 학년 진급제를 채택함으로써 ‘03’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02. 현재 매월 시행되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 시행 프로세스를 실질 수시 내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02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비수도권 (지방)학생들에 대한 정시 경쟁력 강화 가능 03. 전국 학생들이 같은 난이도의 통합형 내신 시험을 보게 됨으로써, 01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Policy-Design 정책 디자인	수시 전국연합학력평가진급검정평가 = 검정고시 +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		
Soicial Effect 사회적 효과	01.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교육 지형 불균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02. 내신 (시험) 비리 등, 각종 수시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03. 형식적 졸업으로 발생하는 사회보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Economic Effect 경제적 효과	01. 기존 시행 중인 시험 횟수를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시험 집행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02. 수시 전국연합학력평가진급검정평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정책 제안 요약	전국연합학력평가진급검정평가 시행을 통해 정시 준비에 대한 교육 지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한 입시를 통해 더 나은 공정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조성할 수 있음.		

02. 문제 상황 및 제안 배경



-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은 표면적으로 공정할 수 있으나, 대입 정시 준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 간 교육 환경, 수준 차이가 상당함.
-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는 최근 명문 여고의 내신 시험 비리와 같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입 정시의 일방적 확대는 비수도권 수험생들에 대한 대입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음.
- 교육 지형 균형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

03.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소개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 검정고시 + 전국연합학력평가(교육청 모의고사) + 내신(시험)

구분	수시전국연합학년진급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목적	학년 진급을 위한 학업 능력 검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월,5월,7월,10월,11월 : (광역) 교육청 6월,9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시	매년 7월 초, 11월 말 (학기 종료 전 시행)	매월 시행 * 사설 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시험영역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선택)	
성적 평가 방식	절대평가	상대평가
내신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실행 핵심 프로세스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에 대한 실적을 담당 교사 등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인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는 과락제를 채택함. (학년 진급 커트라인 설정)
- 학력 미달 인원은 방학을 이용한 기초 학습 강화 교육 이수를 통해 학력 진급 자격 부여.

04.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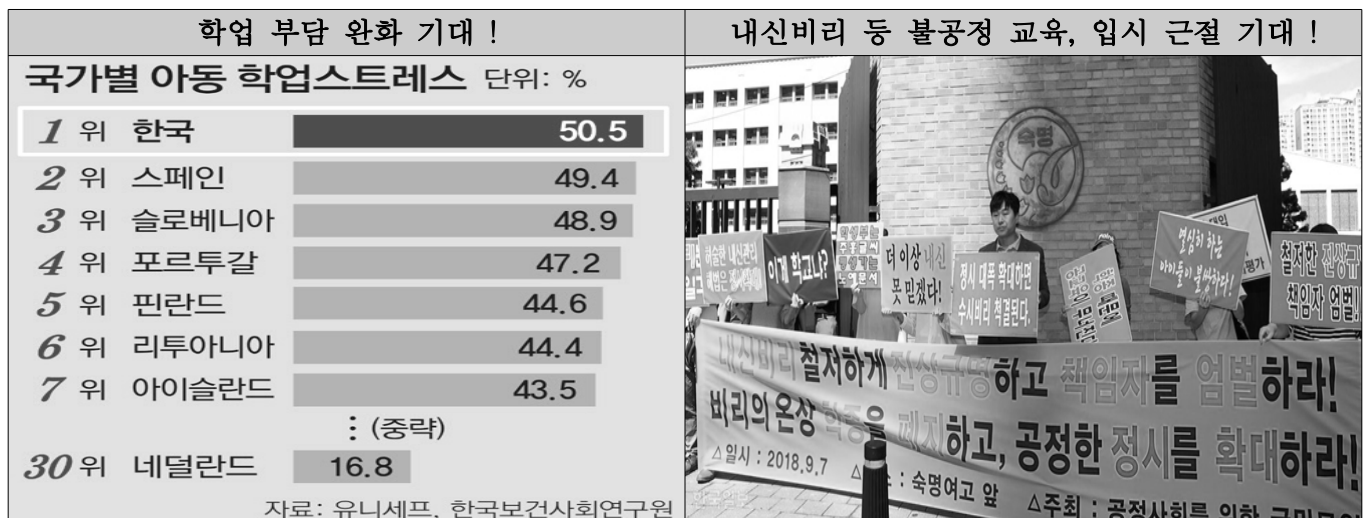
□ 입법·정책(제도)적, 사회적 필요사항

- 대입제도 개편은 정책의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법령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실시, 전문가 정책연구 등이 필요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에 대한 정책 기획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의 담당 부서 증설이 필요함.

□ 인적, 물적, 재정적 필요요소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의 합리적인 출제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광역자치단체(급) 교육청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교육 수준, 환경, 학업 성취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관련 조직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함.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기획 및 시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관련 재정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05. 사회적 · 경제적 기대효과



□ 사회적 기대효과 (Social Effect)

- 기존 연평균 11회의 시험을 2회로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 학생들에 대한 정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내신 비리 등과 같은 불공정한 교육과 입시를 근절할 수 있음.
- 기존 상대적인 난이도를 보였던 학교별 내신 시험이 아닌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점수를 내신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공정하면서 투명한 입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경제적 기대효과 (Economic Effect)

-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를 통해, 연평균 9회에 해당하는 시험 집행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수시 전국연합학년진급검정평가 출제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공공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정치적·정책적 기대효과 (Political Effect)

-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시를 대비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가진 비수도권 (지방)의 이해당사자들 간 정책적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음.

제안내용 설명서

제 안 분 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 과제명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운영 폐지 및 개선방안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은 정년(60세)을 앞두고 1년의 범위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년연장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보완책 마련 후 폐지를 추진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 제도의 개요 ○ 취지: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이 퇴임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1년 이내의 자기계발 유급휴가를 부여(1993년 행정자치부 규정) ○ 대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기간: 5급 이상(강제규정, 1년 기준(충남도청 등 일부기관 6개월)), 6급 이하(임의규정, 희망자 6개월) □ 문제점 1. 무노동무임금 위배: 아무런 업무활동이나 노동의 제공 없이 5급(470만원), 4급 (540만원) 등 연수자에게 고임금의 지급은 현행법의 규정에 위배 2. 제도의 취지 악용: 공로연수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승진 기간의 단축 등 원활한 인사관리 때문인데 퇴임준비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전도된 상황임 3. 대안적 제도의 존재: 인사 적체는 명예퇴직, 교육파견 등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응 훈련은 퇴직예정자 교육프로그램으로 가능 □ 개선방안 1. 제도의 폐지: 공로연수제도는 제도 폐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빠른 시기에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됨 2. 경과규정: 즉각적인 폐지는 일시적인 인사적체, 공로연수 당사자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현행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여 운영하다가 향후 2~3년 이내에 중단(제도 폐기) 조치
④ 기대효과	매년 1천명 안팎에 이르는 막대한 수효의 공로연수 유희인력 발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평등권 인식과 확장에 기여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운영 폐지 및 개선방안

□ 제도의 개요

- 취지: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이 퇴임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기계발의 유급휴가를 부여(1993년 행자부 규정)
- 대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기간: 5급 이상(강제규정, 1년 기준(충남도청 등 일부기관 6개월))
6급 이하(임의규정, 희망자 6개월)

□ 문제점

- 1.무노동무임금 위배: 아무런 업무활동이나 노동의 제공 없이 5급(470만원), 4급(540만원) 등 연수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의 규정에 위배됨
- 2.제도의 취지 악용: 공로연수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앞차가 지나가야 뒤차가 간다”는 말처럼 원활한 인력 운용의 필요성 때문인데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상황임
- 3.대안적 제도의 존재: 인사 적체는 명예퇴직, 교육파견, 인사교류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응 훈련은 퇴직예정자 교육 등을 통해 가능

□ 개선방안

1.제도의 폐지

- 공로연수제도는 제도 폐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기에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됨

2.경과의 규정

- 즉각적인 폐지는 일시적인 인사적체, 공로연수 당사자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여 운영하다가 2~3년 이내에 중단 조치

□ 기대효과

- 매년 1천명 내외의 막대한 수효의 공로연수 유희인력 발생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평등권 인식과 확장에 기여

제안내용 설명서

제안분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과제명	국가와 계약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민간 정부 계약보증금 1억 공사 진행률 90% 재계약 차액 1천만 원 계약보증지급액 1억 원 1천만 원 1천만 원 - 물품을 납부하거나, 용역(건설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갑이 되고 용역업자는 을이 됩니다. - 갑과 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분이 생기며, 불공정함(약자보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정부(국가,지자체)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계약보증의 경우 민간보다 불공정함이 존재합니다. - 계약을 포기한 자(약자)는 회생, 파산, 경제약화, 사업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맺은 계약을 완성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하게 되며, 완성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보증 전액을 정부로부터 몰수당하게 됩니다. - 정부는 1천만 원의 손실을 입고도 1억 원의 보증금액을 청구함으로써 9천만 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며, 용역업자는 공사에 따른 손실외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 이에,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부당한 계약보증 청구와 이를 통해 정부가 얻은 수익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현황 국계약법 제12조제3항(계약보증금), 제18조제3항(하자보수보증금) 및 지계약법 제15조제3항(계약보증금)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음.

<문제점>

- 사업자의 경우 자금 경색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공사 중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경기, 수입자재의 지연 등)
- 그 중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많은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계약이 해지할 경우 민간의 공사에서는 공사의 완정까지의 실손을 산정하여 계약보증금을 취득하나, 국가의 경우 위 법에 따라 실손과 관계없이 전액을 몰수하고 있음.
- 이는 사업자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음. (예 : 2018년 정부산하기관과 계약한 사업자의 경우 99%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설계비 재산정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보증서를 발행한 조합에 정부에서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 보증기관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후 사업자에 구상을 청구할 예정임.)
- 2009년 2월 6일 전문개정된 지계법 제21조제3항(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이 국계법 제12조제3항(계약보증금), 제18조제3항(하자보수보증금) 및 지계법 제15조제3항(계약보증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국계법

현행	개정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u>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u>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u>해당 계약보증금중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u>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21조제3항(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음.

□ 지계법

현행	개정
제15조(계약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계약보증금 중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대효과

- 민간보다 강력한 규제를 개선함으로, 국민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는 모범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음.
- 사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시 사업을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계약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전액지급관련 소송 및 공제조합 약관 등)을 줄일 수 있음.

제안내용 설명서

제안분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과제명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방안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논란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에 지금보다 더 공정한 입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 2020년 주요 대학의 수시·정시 비율은 70:30. 논술 비중 10%. 논술 시험 비중을 포함하여 최대 40:60 개편. 동시에 복잡하고 부모의 역량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제도를 단순한 단일 제도로 변경 <table><tr><th>단계</th><th>반영요소</th><th>설명</th></tr><tr><td>1단계</td><td>학생부 성적</td><td>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고 학생부 성적 그대로 적용</td></tr><tr><td>2단계</td><td>1단계+학생부</td><td>1단계 학생부 성적과 다양한 활동종합 및 자기소개서</td></tr><tr><td>3단계</td><td>면접 또는 실기</td><td>대학교별 자체 기준에 따른 면접</td></tr><tr><td rowspan="2">기타</td><td>논술</td><td>합·불합격 적용 또는 미적용</td></tr><tr><td>최저등급</td><td>대학교 기준에 따라 필수적용</td></tr></table> - 1단계를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하여 부모의 노력이 포함된 입시 불공정 행위를 차단. 이는 입시에 이점을 활용한 특목고 수요자들은 배제하고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 교육 본연의 목적을 제공 -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시와 정시, 선택지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수월성 교육을 위해 특목고를 선택/수시나 정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 - 또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 이를 열악한 교육 지역에 배치하여 교육 상향평준화에 기여	단계	반영요소	설명	1단계	학생부 성적	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고 학생부 성적 그대로 적용	2단계	1단계+학생부	1단계 학생부 성적과 다양한 활동종합 및 자기소개서	3단계	면접 또는 실기	대학교별 자체 기준에 따른 면접	기타	논술	합·불합격 적용 또는 미적용	최저등급	대학교 기준에 따라 필수적용
단계	반영요소	설명																
1단계	학생부 성적	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고 학생부 성적 그대로 적용																
2단계	1단계+학생부	1단계 학생부 성적과 다양한 활동종합 및 자기소개서																
3단계	면접 또는 실기	대학교별 자체 기준에 따른 면접																
기타	논술	합·불합격 적용 또는 미적용																
	최저등급	대학교 기준에 따라 필수적용																
④ 기대효과	1. 학생부 성적 의무반영으로 부모 도움 포트폴리오는 의미 상실. 2. 학생들에게 단순한 입시 선택지를 제공하여 명확한 입시전략수립 3. 입시를 위한 허위 특목고 수요를 제거하여 수월성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방안

<목차>

1. 문제의식
2. 해결방안
 - 1) 수시 전형 단일화
 - 2) 고등학교 육성 정책 변경 및 대학 구조조정
 - 3) 수시·정시 비율 재조정
3. 종합 및 결론

1. 문제의식

2015년 <금수저와 흙수저>로 상징되는 수저계급론이 대한민국에 등장하였다. 양극화와 경제적 대물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공감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지고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단어도 사용되고 있다. 수저계급론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명확한 진단 없이 이것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집단끼리의 편 가르기 심화와 ‘남 탓’으로 인해 동기부여와 유인이 저하되게 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유라와 2019년 조민희의 입시논란으로 인해 수저계급론의 정교함만 부각되었다.

국민이 분노한 것은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10위 경제 규모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키워냈던 것이고 ‘부모가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은 이 믿음을 정면으로 깨부순 사건이다.

이에 입시에서 70%에 달하는 수시 비율에 불만을 제기하고 정시 100%를 요구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위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된 사건들은 대부분 수시에서 발생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시 100%로 변경했을 때 지금보다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더 나은 교육제도라고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오늘날 수시 비중이 확대된 것은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정시라는 획일화된 교육제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들에게 교육철학으로서 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제도 간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방안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리고 창의적, 비판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으며, 누적된 교육과정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시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입시 공정성 확보방안은 큰 틀에서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경쟁을 통해 입시과정에서 끊임없이 동기부여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수시 전형 단일화

대학교 입시제도는 큰 틀에서 정시와 수시로 구분된다. 정시는 일반적으로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내신성적, 활동 등이 종합된 것을 바탕으로 대학교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특기자 전형, 논술 등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며, 대학교 별 정책에 따라 반영 비율과 전형은 차이가 있다. 연세대학교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 2021 수시 전형별 전형요소>

구분		학생부종합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전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고른기회전형				
		면접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 균형		국제 인재	체육 인재	예체능계열 제외				예체능 계열		
				국내고	해외고					연세 한미음 학생		농어촌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1단계	학생부 등 서류평가	60%	100%	100%	100%	100%	-	100%	77.8%	100%	100%	100%	100%	100%	-	
	학생부교과(정량평가)	40%	-	-	-	-	-	-	22.2%	-	-	-	-	-	-	
2단계	1단계 성적	40%	60%	60%	60%	60%	-	60%	90%	60%	60%	60%	60%	60%	-	
	면접평가	60%	40%	40%	40%	40%	-	40%	10%	40%	40%	40%	40%	40%	-	
일괄합산	학생부 등 서류평가	-	-	-	-	-	-	-	-	-	-	-	-	-	60%	
	실기시험	-	-	-	-	-	-	-	-	-	-	-	-	-	40%	
	논술시험	-	-	-	-	-	100%	-	-	-	-	-	-	-	-	

※ 예체능계열의 예능계열은 음악대학 소속 모집단위, 체능계열은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의미함

※ 예체능계열의 예능계열은 음악대학 소속 모집단위, 체능계열은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의미함

*출처: 연세대학교 2021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보면 수시 전형 내에서도 학생정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등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도 면접형, 활동우수형, 국제전형 등 세분화가 되어있다. 또한 각 전형마다 전형요소들도 차이를 보인다. 연세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역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유는 면접형과 체육인재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외부 역량에 따라 입시전형의 유리함을 가

저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부성적을 반영하는 면접형 전형이 있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이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지방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자신의 노력 외 다른 것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학생부 성적을 배제하고 부모의 지위나 다른 요소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우수형과 같이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요인으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교 입시 자체가 지위와 부의 대물림은 권장하여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것과 같다.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일 수시 전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일 수시 전형>

단계	반영요소	설명
1단계	학생부 성적	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고 학생부 성적 그대로 적용
2단계	1단계+학생부	1단계 학생부 성적과 다양한 활동종합 및 자기소개서
3단계	면접 또는 실기	대학교별 자체 기준에 따른 면접
기타	논술	합·불합격 적용 또는 미적용
	최저등급	대학교 기준에 따라 필수적용

*사회배려 또는 기회균등전형 등은 별도 경쟁

학생부 성적으로만 1단계를 실시하고 2,3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논술은 미실시하거나 합·불합격으로 전형에서 사용하여 자기소개서가 타인에 의해 대필되었는지 또는 논리적사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최저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위 방식은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데 2가지 기여를 한다. 첫째, 학생부 성적을 1단계 적용하여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부모의 지위나 타 도움으로 입시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 없다. 두 번째, 최저등급을 의무적용함으로써 대학교에는 최저 학력수준을 보장하며, 생활기록부와 활동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방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과 특목고에 대한 역차별, 단순한 수시 폐지 등의 주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2),3)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2) 고등학교 육성 정책 변경 및 대학 구조조정

1)에서 단일 수시 전형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으로 전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과 특목고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육성 정책 변화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활용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큰 틀에서 수월성 교육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고, 자율형, 자립형 고등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사회배려 전형과 선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인원만 한해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에 이들을 위한 입시 전형의 존재는 나라가 스스로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수월성 교육 방식과 고등학교 지원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첫째, 수월성 교육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지금과 같은 최상위 학생이 아닌 더 폭 넓게 늘려야 한다. 또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특목고와 같은 곳을 위한 입시전형을 없애야 한다. 수월성 교육의 목적은 뛰어난 인재의 잠재력과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지 입시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진행된다면 입시를 위한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가짜 수요가 사라지고 진짜 수요만 남게 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공급을 조절하면 될 것이다. 이 후, 지금보다 더 폭 넓은 진짜 수요를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을 늘린다면 수월성 교육의 효과도 늘어날 것이다.

둘째, 학생부 성적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면, 주로 광역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고교등급제 적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은 자신이 선택할 고등학교에 영향을 준다. 고교 평준화 지역은 학생부 성적을 위해 A학교를 갈지, 수학능력시험을 위해 B학교를 갈지 선택권이 제한당한다. 반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은 정시와 수시 사이에서 자신의 전략을 위해 선택을 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을 위해 고등학교를 하향지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목표했으나 못 갔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고등학교 선택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는 초기 노무현 행정부 때와 같이 등급만을 적용하는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시전략에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입시제도는 입시에 있어 선택지를 부여하지 않고 높은 수시 비율과 학생부 성적 이외의 활동을 강제하기 때문에 모두가 고액 학생부 종합과외를 고민하게 만들고 부모의 지위와 돈을 이용한 공정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입시에 결과는 학생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고교 비평준화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지를 강제하지 말고 열어줘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구조조정 된 대학의 인력을 지역별로 전문가 자문 인력 pool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활용하여 교육여건이 열악 또는 부족한 고등학교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늘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으로 운영하여 양극화 되는 교육여건에서 하한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육여건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시·정시 비율 재조정

현재 주요 대학들의 수시·정시 비중은 다음과 같다.

<주요 대학별 수시·정시 인원 및 비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 시립대
수시 전체	2407	2048	3120	1097	2245	2150	3171	3193	1070
수시 논술	0	384	0	235	532	375	808	684	101
정시	769	1220	769	477	1128	756	1252	1548	681
합계	3176	3268	3889	1574	3373	2906	4423	4741	1751
수시 비중	75%	56%	80%	69%	67%	73%	72%	67%	61%
논술 비중	0	10%	0	15%	15%	13%	18%	14%	6%
정시 비중	25%	34%	20%	31%	33%	27%	28%	33%	39%
전체 수시비중 70% / 논술비중 10% / 정시비중 30%									

*대학별 2021년 입시요강 정원 내 인원 기준

위의 제안을 고려할 때 현재 수시 70%와 정시 30%의 비중은 최소 50대50 비율로 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추가로 연간 논술로 선발하는 비중인 10%를 유동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수시 40대 60 비율로 조정하여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입시 전략의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기존 수시제도보다 사회적으로 공정성이 더 높은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종합 및 결론

대학이라는 입시의 결과물은 대한민국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학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결되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영향을 주고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모두의 기대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에 몰입하고 비정상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대학으로 많은 것을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측면이 탄생하였고, 이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식개선의 문제를 넘어 공정함을 통해 경쟁하고 타인의 어긋난 도움 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위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잘못된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하고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입시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설명서

제 안 분 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 과제명	농어촌 입시,취업 특례의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법령 명문화 제안의 건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의 인구는 약 11만8천명이다. 이는 전국 행정동 평균인구인 20,267 명을 2배나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남양주 화도읍 11만4천명 등으로 법정동으로의 승격을 거부하는 읍이나 면이 늘고 있다. 이는 농어촌 행정구역으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행 정구역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행정구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어 촌특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제안서를 고안했다.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1)‘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의 인구는 약 11만8천 명이다. 남양주시 화 도읍 11만4천 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10만8천 명, 남양주시 진전 읍 9만3천 명, 순천시 해룡면 5만4천 명으로 읍, 면 단위로서는 거 주인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과거에서부터 여러 차례 받아오고 있 다. 이러한 거대 읍, 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입에서의 농어촌 특별전형, 주민세의 증가 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읍이 동으로 전환되면 입학이나 취업 시 농어촌 특례 전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주민세도 3배가량 상승하기 때문이다. 상기에 서술한 물금읍의 경우는 2)2016년 양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실행되면서 도시화가 이뤄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물금 읍 범어리의 경우는 법정리임에도 불구하고 5만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 양산캠퍼스도 있다. 3)대구광 역시 달서구와 달성구의 경계지역에는 달서구에는 대진고, 달성군에 는 대원고가 위치해 있고, 두 학교의 거리는 900m에 불과하다. 하 지만 행정구역상 달성군의 대원고등학교는 농촌학교로 분류돼 농어 촌 지원이 가능하다. 달성군은 인구 2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군이라는 이유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있다. 달성군의 농업 종사자는 1.7%로, 이러한 지역적 불평등은 수도권에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반대의 사례도 역시 존재한다. 4)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준 대부동의 전체 가구 4,957가구 중 2,493가구(50.3%)가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뽑힌다.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지역적 역차별이 존재한다. 5)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지방대 출신을 20%씩 채용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대 할당제’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는 6)지방대육성법과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도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한다고 제도화 되어 있다. 위 법령을 근거로 지방대학의 대학들에 혜택을 준다면, 이 또한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에게 역차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지방 지역에 거주하던 학생이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보다는 지방 대학에게 강제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할당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7)이러한 지방대학 졸업생의 대한 공공기관 일자리 채용은 기회균등의 박탈이라는 역차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과주의를 배제한 채 단지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라는 획일적 기준을 사용하여 사실상 다른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관련법의 구체적인 명문화는 필수이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법령을 살펴보면, 읍, 면, 동의 정확한 승격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 동의 설치 승인기준)의 3항동에 관한 법령에는 동의 승인기준이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도 법정동의 승격, 통폐합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

으며,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의 경우는 승격, 자연감소,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의 경우는 통폐합한다는 식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의 명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지자체 재량으로 승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0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정동, 행정동 설치에 대한 관계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동 설치 승인기준은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국토의 균형 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물금읍, 화도읍, 오폭읍 등의 읍, 면의 경우는 주민들이 동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동으로의 승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중앙정부에서의 강제성은 없고, 계속해서 농어촌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의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읍, 면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는 법령은 크게 1) 지방자치법 개정 2) 농어촌복지법 개정 3) 고등교육법 개정이다.

1)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① '제2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구역의 구체적 승격, 격하의 기준 설치 ② 행정동, 법정동의 관련 법률 개정이 주요 개정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 개발, 택지지구 개발이 진행되는 지자체,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따로 분리하여 분동(分洞)한다는 명시를 하거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구에 한해서 특별법 또는 조례, 시행령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농어촌복지법 개정에 관하여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① '제1장 제2조'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정의 구체화 및 명문화 ②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에 명문 되어있지 않은 농어촌 특례입학의 명문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복지법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법률, 사회복지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농어촌 주민들을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명문화는 필수이다.

3)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관해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1)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관 대학 제34조(학생의 선발 방법 등)'에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어촌전형, 장애인전형 등 특별전형 및 정원외 선발에 관해서 그렇다 할 관련 규정이 있지 않아 관련법률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④ 기대효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혀서 제도가 원활히 돌아가야한다. 상기의 제안으로 특혜, 피해를 보고있는 학생, 취준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특례입학, 취업의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군, 읍, 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례를 받아온 신도시, 대도시 거주자가 다수 존재했다. 인구의 감소, 지역적 불균형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혜 관련해서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법의 정비도 꼭 필요하다.

지방대 특별채용에 있어서도 출신대학에 의한 불평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정원의 일정 모집을 지방대 출신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하는 경쟁과는 맞지 않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서도 여론의 비판이 극에 달했었다. 8)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험에서 7,33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식적으로 전원고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채용의 불평등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야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능력으로 채용을 선발해야하며, 특히 정부기관, 공무원은 일자리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법률의 정비와 국민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평등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 1)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20.05.27., 222p
- 2) 인구 5만명 넘는 양산 물금읍 범어리, 里→洞 승격될까, 더 팩트, 2020.12.02., 강보금 기자
- 3) 40분 거리 '강남 학원' 다니면서...'농어촌 전형', MBC뉴스, 2019.12.24., 정동훈 기자
- 4) 안산시, 대부동(洞)→대부면(面) 바꾸려는 까닭은, 중앙일보, 2020.09.26., 최모란 기자
- 5) "지방에서 수도권大 왔더니 역차별"... 공기업 지방대 할당제에 청년들 '허탈', 조선일보, 2020.11.06., 김송이 기자
- 6)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역인재 할당제, 부산일보, 2020.11.07., 김은영 논설위원
- 7) 김동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채용 확대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0. 부산
- 8) 인국공 정규직 전환시험, 7333명 중 탈락자는 딱 2명 조선일보 2020.09.22., 최원국 기자

제안내용 설명서

제안분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 과제명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창설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청소년 시기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대입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의 불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정책은 청소년 대상의 공개 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창설과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창설 프로그램은 비선별형 참가(누구나 참가 가능), 오픈소스 활동 평가에 따른 선별형 수수료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 인증과 활동 인증이라는 각 1년씩 총 2년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수수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창설과 함께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소프트웨어의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 4차 산업혁명 아래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청소년 시기에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단순히 공정성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공정한 교육을 통해 국가 인재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기대효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한국 인재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정한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산업 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청소년 공개 소프트웨어인증제와 저소득층 지원

0. 요약

교육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존재하나, 대입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외의 교육기회는 가구의 소득 편차에 따라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주축으로 소프트웨어의 큰 발전이 이루고 있으나, 한국은 공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제안서에서는 단순히 청소년 시기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공정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의 공개 소프트웨어 인증제를 같이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공정성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공정한 교육을 통한 국가 인재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론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1,362.75 USD로 한국은 1970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대입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은 청소년 시기 교육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시대를 주도하는 21세기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온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문화, 예술, 창작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영역의 학습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학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직업(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하의 세계 변화 속에서 인재양성 및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장기 교육과 단기 훈련 모두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1]

이러한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은 공교육만으로 재능을 키우기에는 부족하여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가 크게 나뉜다.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용지출은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을 위해 대부분 할당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은 이러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 이러한 실태는 저소득층에게 미래에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학문으로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4차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역량인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한 청소년 시기의 교육의 방안과 불공정 해소에 초점이 있다. 단순히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닌,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함께 제안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시키고,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정책의 내용은 [저소득층에게 소프트웨어 학습을 위한 전산장비와 강의 수강료 지원], [공개 소프트웨어(Opensource) 활동을 통한 공개 소프트웨어 인증제]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정책

제안하는 정책은 청소년 대상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차세대 보안리더 반양성 프로그램(bob)와 같이 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창설과 프로그램 참여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창설 프로그램은 **비선별형 참가**(누구나 참가 가능), **오픈소스 활동 평가에 따른 선별형 수료**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수한 저소득층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공개 소프트웨어 인증제

①-(1) 배경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설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말한다.[2]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특정 기업이 사실상 기술 표준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모든 기업 및 사용자가 코드 공개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오픈소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시대가 도래했다.[3] 그러나, 한국의 오픈소스 산업의 현주소는 IDC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약 600억달러(한화 65조2천억원) 규모를 형성했지만 국내는 전세계 시장의 0.25%인 1,602억원 규모에 그쳤다.[4] 이러한 실태 속에서 청소년기에 소프트웨어의 교육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①-(2) 내용

청소년기의 소프트웨어 학습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기	내용
1단계	컴퓨터 과학의 학습과 개발 언어의 학습
2단계	기술 및 개발 학습
3단계	프로젝트 개발 참여
4단계	상용 서비스 개발

표 1 청소년 소프트웨어 학습 단계

인증제는 학습인증과 활동인증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각 단계는 1년의 기간 동안 수행되며, 독립적으로 인증된다. 활동인증은 학습인증을 받은 청소년이 신청하여 수료할 수 있다.

각 인증과정은 **비선별형 참여**와 **선별형 수료**를 특징으로 한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인증은 시험을 통해 수료자를 선정하고, 활동인증은 공개 소프트웨어 참여도를 통해 수료자를 선정한다.

①-(2)-(1) 학습인증

<표1>의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학습인증에 참여한 청소년은 1년의 기간 동안 총 각 2번의 시험과 과제를 통해 선별형 수료를 할 수 있다.

6개월간 이루어지는 1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전산학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파이썬, C++와 같은 언어를 학습한다. 소프트웨어의 학습 강좌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강의가 예산상의 이점뿐만 아닌, 강좌 자체의 질도 신설했던 것보다 높으므로 그대로 활용한다.

그 뒤 6개월의 기간 동안 각 학생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많은 영역 중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과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수료할 수 있다.

기한	시기	평가	
6개월	1단계	과제	간단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시험	전산학과 프로그래밍 언어
6개월	2단계	과제	영역별 프로젝트
		시험	영역별 선택 시험

표 2 청소년 소프트웨어 학습 단계

①-(2)-(1) 활동인증

<표1>의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1년의 과정이다. 학습인증을 수료한 청소년은 활동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참여 활동을 수행한다. 3단계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 리뷰, 개발 참여 등을 수행하며, 4단계에서는 상용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참여도는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항목	내용
공개 소프트웨어 분석	기존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버그 리포트, 코드 리뷰, request
오픈소스 프로젝트 구상	새로운 공개 소프트웨어를 구상하고 구현

② 저소득가구 소프트웨어 학습 지원

대입을 위한 정규교육 과정 외의 학습인 소프트웨어의 학습은 저소득가구의 청소년이 접근하기 힘들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정규 교육 과정의 편성만으로 역량의 강화가 힘든 소프트웨어 영역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청소년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영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인증제와 함께 참여한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 중 선별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학습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시기	필요 지원
1단계	전산 장비, 강의 구매 비용
2단계	클라우드 이용 비용, 강의 구매 비용
3단계, 4단계	데이터 바우처 구매 비용, 클라우드 이용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비용

Reference

- [1] 장윤종 (2017) KIET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9월 특집
- [2] 최성호 (2020) 4차 산업혁명의 숨은 원동력, 오픈소스 현황과 시사점,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산은조사월보
- [3] 김병선. (2018). 오픈소스 개념 및 주요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5(5), 45-51.
- [4]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 동향 정보 : http://kossa.kr/xe/index.php?mid=link2&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2&listStyle=list&document_srl=2015052, 자료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안내용 설명서

제 안 분 야	‘우리는 불공정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① 제안 과제명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불공정 해소 - 기존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중심으로 개선
②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정책제안의 배경 □ 도시주택에 비해 소외된 농촌주택 정책 ○ 최근 정부가 실행중인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해,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도시중심의 주택정책으로 몰리고 있다. 결국, 도시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 개량 등 국가의 주택정책이 도시주택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부족함 □ 농촌주택 신축 및 개량의 수요 증가 ○ 농촌의 경우 고령화된 주택과 고령화된 인구* 증가 * 2020년 현재 농어촌 고령 인구 비율 24%(도시12.3%, 전국 13.9%) ○ 포스트 코로나 및 베이비 부머 은퇴로 대규모의 귀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귀농 귀촌 45만 중 귀촌이 97%를 차지, 2010년 이후 농촌인구 소폭증가(8,627천명->9,014천명->9,485천명) □ 농촌주택개량사업 소개 및 현황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목적을 둠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함(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해야 함)

- 농촌개량자금의 경우 연초에 자금이 지자체 신청 등을 통해서 배정되며,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배정된 자금규모에 따라, 해당 자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자금 한도가 있는데, 소요자금이 적게드는 증·개축 사업(최대 1억원)보다는 규모가 큰 신축사업(최대 2억원)을 많이 신청하여, 한정된 사업자금을 다양한 사업자에게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신축에 비해 적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증축과 개축을 우리 사업에 접목해서 활성화한다면 사업 발전 및 확산에 기여 가능함

★정책제안의 필요성

□ 생애주기에 따른 건물 개량의 필요성

- 농촌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며 이는 실거주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도시에서는 건축의 생애주기에 따라 조례 등을 통해 고령화된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증·개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농촌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령화된 농촌 인구에 따라 노인의 생활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및 개량이 필요함

□ 농촌의 다량의 빈집 발생

-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다수의 빈집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집들에 대한 수리사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빈집도 다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함

□ 고령층의 고독사 증가

- 농촌 역시 고령층에 대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시간과 거리,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고령층에 맞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 가능

③ 주요 연구 내용 (구체적 기술)	★ 주요연구 내용 □ 농촌주택개량자금 고도화 및 맞춤형 자금 지원 ○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및 지원체계 고도화 - 현재의 단순한 농촌주택자금을 세분화 하여 상황 및 용도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재탄생 시키고, 규모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주택자금 신청시기 변동 - 농촌주택개량자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를 연초에 선발하여 다른 기간에는 사업희망자들이 지원하기 어려움, 상시 모집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도와 유동성을 높여야 함 ○ 사업대상자의 범위 확대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지원자 풀이 줄어듦 - 완벽한 귀농이 아니더라도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인의 2주택을 인정하고 동시에 농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 주택자금 용도에 따른 다양화된 지원 - 농촌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신축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치 기간이나 이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동시에 대출한도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처럼 ‘보조금’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

- 고령화된 농촌인구 및 농촌주택에 맞는 집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재 귀농귀촌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촌주택설계자료,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방법의 경우에는 2010년도 이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새롭게 주택을 설계할 경우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이며 실제 활용도 적음
 - 고령화된 농촌주택의 개보수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연구하고 업데이트 할 필요성이 있음
 - * 사례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 후 실제로 이러한 사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령화된 농촌 인구에 맞는 농촌주택의 개보수 및 설계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고령인구에 신체 활동에 맞는 주택 설계 구축 및 개보수 자료 지원 필요
 - *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령화된 농촌 주택 및 빈집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합치고, 귀촌 인구에 맞는 사이트 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구축
 - * 주택 관련 공공데이터 : 귀농귀촌종합센터-주택설계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지도서비스
 - * 정책자금 관련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 정책자금 (귀농귀촌, 청년귀농 등) 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보조금, 정책자금 법 및 기본 규정, 농업정책보험 금융원-농림수산정책자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연도별 정책자금업무방법,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지원시스템 예시>

시도: 사군구:
 구분: 유형:

검색

Click

NO	등록일	소재지	면적	연면적(m²)	상세보기
1	2019.07.0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리 329-1			
2	2019.07.0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리 654-1			

농가주택(토지) 구입 시 주의사항

1. 등기 확인
2. 지상권 확인
3. 도로 확인
4. 농지가 팔려있는지 확인
5. 개조가 가능한지 확인

연계

1. 법원 등기사이트(iros.kr)
2. 건축물 대장 열람
3. 포털 로드뷰
4. 국토지적공사 사이트

- 위치에 따른 빈집 지원 및 연계 데이터 -

입력 항목	사용자 입력
지역 선택	나주시, 함평군, 서천군 등등
나이, 성별	나이, 성별 입력
작물	벼, 토마토 등등

보조금 조회하기



국가보조금		정책자금	기타
도비(국가보조금)	군비(지자체 보조금)		
귀농인정채장려사업 240만원 (1인/20만원, 2인/35만원, 3인/50만원) 최대 연 600만원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업창업)세대당 300만원 한도 (주택)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예산 범위 내)	농어촌 진흥기금(전라남도 기금) 농업인 1억 이내 (연1%, 연계이율 10%)	출산 및 보육지원 2년간 매월 지원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25만원 / 넷째아 30만원 / 다섯째아 이상 40만원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군비 70%, 자담 30%)	농업융합자금 사실자금 : ● 개보수자금 : ● 운전자금 : 3억 이내 농기계자금 : ● 수확 및 규모화 사업 자금 : 5억이상 42억 이내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 0~5세 영유아 대상 매월 지원 / 만0세 441천원 만1세 388천원 / 만2세 321천원 / 만3~5세 220천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12월간 매월 지급 (최대 1200만원)	농촌산림정착자금 대출잔액기준 1000만원 이내 단, 재해인 경우 5000만원 이내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협의 후 배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영유아 대상 매월 지원 12개월 미만: 200천원 / 24개월 미만: 150천원 / 25개월 ~ 취학전: 100천원	
3000만원 예상	3억 ~ 4억 예상	2000만원 예상	
합 계		총 예상 지원금은 00000000원 입니다.	

- 정책자금 관련 연계 데이터 -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한 컨설팅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받아서 고령층이나 저소득의 농촌주민들에게 적은 사업비가 드는 증·개축 위주의 사업을 소개하고 개발함(기존의 집 고쳐주기 노하우 활용)
- 기존의 사업은 연초에만 신청을 받아 해당 시기를 놓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이 간절한 사업자를 모으고 증·개축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시기에 빌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집 고쳐주기 사업은 빈곤과 주택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을 어느 정도 하고 차액분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이차보전자금) 신청 지원 및 자금 확보, 어르신 집 설계 지원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사업의 발전을 통해 기존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음

□ 생애주기에 따른 건물 개량의 필요성

○ 고령화된 주택에 맞는 개보수 실시 및 고령화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설계를 제공

→ 해당 기준에 맞추면서 비싼 신축이 아닌 개보수 위주의 수리 방법을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결과와 내용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여 향후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 방법 공유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농귀촌서비스에 설계도 공유처럼 해당 사례를 정리하여 부분 증축 개축의 기술을 공유하고 나이와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주택을 설계하여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

* 참고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 -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

<http://www.returnfarm.com/cmn/returnFarm/module/fmglhnsnc/fmglhnsncList.do>

□ 농촌의 다량의 빈집 활용

○ 개보수 혹은 재건축 하는 주택 중, 근처에 농촌 빈집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집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서 추후 주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함. 장기적으로 새로운 귀촌인이나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듦

→ 일본 농촌 빈집 등을 상가로 활용

오사카 카라호리 지역에서는 오래된 민가와 목조주택 등을 갤러리와 상점가로 리모델링하여 성공적인 6차산업을 진행하고 있음. 효고현 이와지섬에서는 후생노동성 주관으로 '이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 상품 및 관광투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어촌 공동화를 막고 있음

→ 제주도 빈집으로 '다자요' 활용

지방에 방치된 빈집들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농어촌 빈집 숙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한 사업가가 제주도에 '다자요'라는 브랜드로 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집고쳐주기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확장 단계: 기존의 농촌 집 고쳐주기 → 근처 빈집 활용을 통한 주거 공간 확보 → 생활공간화된 빈집 확보 → 지자체와 협력하여 숙박시설·상가 등으로 활용 확대

□ 집 고쳐주기 사업 이후 ICT 기술 결합을 통한 고독사 방지 (사후관리 서비스)

- 기존의 집고쳐 주기 사업의 경우 저소득·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도 농촌현장이 기존 산업 대비 2~3배 사고 위험이 높으며 고령층이기 때문에 고독사 가능성도 높음.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도 ict 기술을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사업을 집고쳐주기와 더불어 진행해야 함
- 음성안부확인서비스 : 전화·메시지를 발송하여 3회이상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확인 실시
- TV안부확인서비스 : TV셋톱박스를 4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계속 켜져 있는 경우 이상징후로 판단하고 방문확인 실시
-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 : 문열림센서(IoT)를 통해 3일 이상 문열림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방문 확인 실시
- 라인 등 메신저 단톡방 서비스 : 통이나 반, 마을 단위의 채팅방을 운영하여 조기에 이상징후 감지

★ 제안의 실현가능성 (소요예산, 법·제도 등을 고려)

□ 현재 정책 변화를 통한 성공 가능성

- 이미 존재하는 주택개량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분배해서 다양화 추구 <농촌주택개량자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00	550,000	550,000	550,000
○ 농촌주택개량자금	500,000	550,000	550,000	550,000

- 사업관계자들의 높은 수용성 기대(높은 실현 가능성)
 -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행정기관과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그리고 사업대상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
-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한 투자 다양화
 - 기존 정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중에 있으므로, 해당 연구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건축 가이드 라인과 재정 지원체계를 초창기 구축 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
 -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업정책자금 감독기관),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등에서 지속적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후관리 가능
- ★ 제안의 독창성 (기존 아이디어·제도·정책과 차이점)
 - 기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체계에서만 변화
 -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고, 추가하는 선에서 사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 가능
 -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거부감이나 생소함 없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음(높은 수용성 기대)
 -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주거환경에 포커스를 맞춤
 - 고령화된 농촌의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인구 맞춤형 서비스제공 가능
 -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

④ 기대효과	★ 정책실현을 통한 기대효과 ☐ 불공평한 주거·주택정책의 정의 실현 ○ 도시주택에 비해 소외되어 있던 농촌주택에 대한 개발로 공정한 주택개발 가능 ☐ 균형있는 국토개발 ○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있는 개발(균형적있는 국토개발) ☐ 도시중심의 주거 복지 탈피 ○ 고령화된 농촌인구에 맞는 맞춤형 주택개발 및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 복지 실현 ☐ 농촌경제 활성화 ○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을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 ☐ 공동화 되는 농촌사회에 대한 안전 확보 ○ 관리가 어려운 농촌 주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